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5. 12.

통 일 디 자 인 연 구 소

제 출 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최종성과
품으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통일디자인연구소 대표 전 영 선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 영 선 (통일디자인연구소 대표)

<공동연구원>

이 창 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연구보조원>

오 삼 언 (동국대 석사과정)

황 일 화 (동국대 석사과정)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I. 들어가며	1
II. 국내외 평화·통일 교육의 사례	4
1. 통일교육 운영체계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4
2. 경기도 사례	8
3. 인천광역시 사례	11
4. 서울시 사례	13
5. 독일의 사례	15
6. 총평	18
III.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구상	20
1. 서울시 특성과 평화·통일교육	20
2.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25
3.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본 방향	30
IV.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	36
1.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과정 ...	36
2.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맞춤형 개발	38
3.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형 개발	43
4.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거버넌스형 개발	47

V.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체계, 예산 · 51	
1.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추진전략	51
2.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추진체계와 역할	54
3.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추진 자원 및 예산	57
4.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전체 평가 방도	60
VI. 마치며	62
참고문헌	64
부 록	67

< 표 목차 >

<표 1> 기존 통일교육 운영체계(통일교육원 중심)	5
<표 2>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7
<표 3> 자치구 평화·통일관련 행사	14
<표 4> 서독 ‘사회’교과서의 동독 관련 내용 비교	16
<표 5> 독일 통일정책 실행과정의 단계와 특성	17
<표 6> 서울특별시에 대한 경제적 집중도	20
<표 7>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	35
<표 8> 2016~2019년 평화·통일교육 소요예산 추정	59
<표 9>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지표	61

<그림 목차>

<그림 1> 서울특별시의 특성	21
<그림 2>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평화·통일 교육	28
<그림 3> 1교육 + 1행사 형식의 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45
<그림 4>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48
<그림 5>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추진단계	53
<그림 6>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추진체계의 단계적 발전	55
<그림 7>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추진체계의 역할	56

<부록 목차>

<부록 1> 통일교육원 교육과정 세부 현황(p.6)	67
<부록 2> 통일부 통일교육원 위탁 교육 과정(p.8)	68
<부록 3> 2014년 경기도 국외통일교육 아카데미(p.9)	69
<부록 4> 경기도청 지역형 현장체험 통일교육 프로그램(p.10)	70
<부록 5> 경기도 DMZ포럼(p.10)	72
<부록 6>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프로그램(p.11)	73
<부록 7> 서울시 자치구 주요 평화·통일 프로그램(p.14)	76
<부록 8>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수요조사 인터뷰 (1): 정현숙 흥사단 민족 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p.24)	78
<부록 9>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수요조사 인터뷰 (2): 김창수 코리아연구 원 원장(p.23)	80

I. 들어가며

□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증대

- 분단 70년을 극복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 의식의 증진 요구.
- 분단의 관성을 딛고, 민족 발전의 과제인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제시됨.
- 남북갈등 및 남남갈등을 해소하려는 국가, 지자체,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 의식 함양 교육 필요.

□ 지자체 차원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 2009년 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1999년 제정)제6조 3항은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통일교육의 근거가 마련됨.
- 2015년 4월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서울시 및 일부 자치구에서 평화·통일교육 및 행사 진행

- 서울시에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서울시민대학’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에서 ‘통일인문학’을 주제로 한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2015년도에 서울시 자치구 중 서대문구는 ‘광복 70주년 평화음악회’를 진행하였고, 성동구는 남북 음악이 하나가 되는 ‘겨레의 소리 악(樂) 페스티벌’ 등 통일관련 행사를 진행함.

□ 서울시에 적합한 평화·통일 교육의 개발 및 실시 필요

-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을 총괄하고 있음. 통일교육원의 교육은 주로 정부의 정책전문가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통일교육이 대상에 따라서 세분화되고는 있지만 지역적 특색을 가미한 통일교육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므로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 교육 내용의 개발이 필요함.
- 서울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방식을 개발해야 함. 평화·통일 교육은 현재의 평화만이 아니라 통일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써 의미가 있음. 통일 문제에 관심이 낮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 교육 방식이 필요함.
- 서울시 각 구청 및 시민단체와 연계된 거버넌스형 평화·통일 교육 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각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화통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통일 교육 체계화가 필요함.

□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의 기대효과

-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특성화된 평화·통일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음.

- 서울시 각 구의 역사에 맞는 통일교육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통해 평화·통일 교육의 지역적 밀착성을 증진시킴.
- 대중적인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함.

II. 국내외 평화·통일 교육의 사례

1. 통일교육 운영체계

1)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계획 수립

-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통일교육원으로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통일교육, 사회 통일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음.

교육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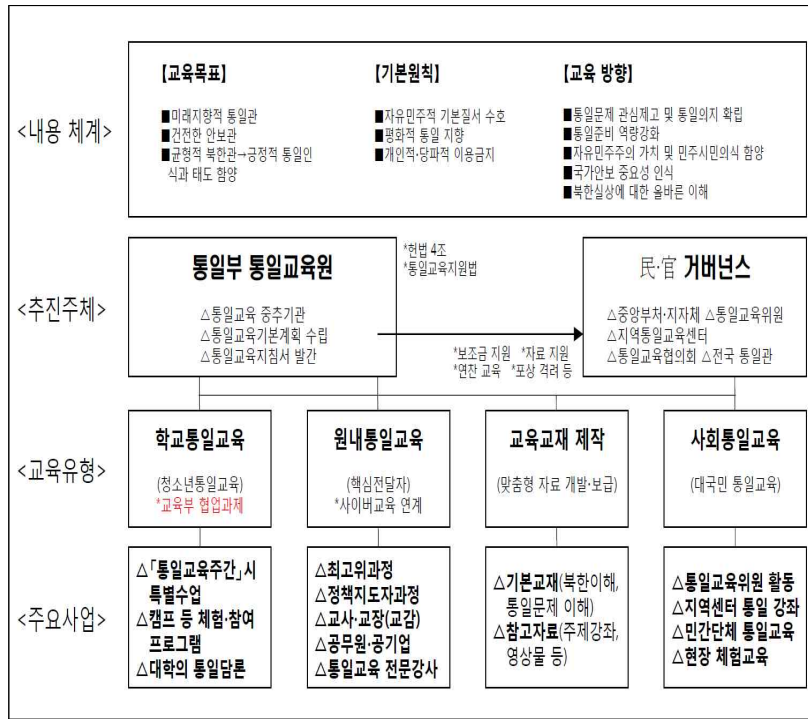
- 통일교육의 대상은 통일 관련 정책의 핵심전달자(교사, 전문 강사 등), 통일을 대비하는 정책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통일준비 인력(중앙·지방체·공기업 등), 학생,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교육목표 및 한계

- 통일부의 통일교육 목표는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갖고 '건전한 안보관·균형적 북한관을 통한 긍정적인 통일인식 및 태도 함양'에 있음.
-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은 국민들에게 통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확산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응하여 정권에 따라 정책이 변화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¹⁾

1) 박광기,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p. 19-20 참조.

〈표 1〉 기존 통일교육 운영체계(통일교육원 중심)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통일교육 운영계획』 (서울: 통일교육원, 2015) 참조.

□ 추진주체 및 주요 사업

-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 지침서 등을 발간, 헌법 4조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 보조금, 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통일 교육 진행 : 「통일교육주간」 시 특별 수업, 체험·참여 프로그램 등

- 교사·강사 등의 핵심전달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내통일교육 : 최고위 과정, 정책지도자과정, 사이버교육 연계
- 각 사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교재·자료 개발 및 보급
- 통일교육 관련 민·관(民·官)거버넌스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위원협의회,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협의회 등이 있음. 이들 단체에서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국민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통일교육 과정 현황

- 통일부의 통일교육 과정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됨. 장기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는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정책지도자 과정 등이 포함된 전문 과정이 있음. 전문과정을 제외하면 대체로 2~5일 동안 요청 단체나 대상에 따라서 단발성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통일교육으로 계획된 교육 횟수 115회, 인원 총 62,480명임. (*부록 p. 67 참조)

□ 통일교육 기본 내용

- 남북관계 현황과 실태, 남북관계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실상
- 한반도와 주변국들 간의 상호연관성과 영향력을 이해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방안

- 분단폐해를 일소하고,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기가 될 통일의 이익과 혜택, 미래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해. 즉, 통일의 이익과 권리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으로서의 통일준비 노력과 참여 공감대 형성 방안
-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실을 이해하고, 발전과 평화의 밑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국제위상 등의 이해를 통해 올바른 국가관, 긍정적 사회인식, 국민적 자긍심 고취²⁾

〈표 2〉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출처: 박광기,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p. 68

2)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통일교육 운영계획』 (서울: 통일교육원, 2015), p. 7-9.

2. 경기도 사례

1) 경기도청

□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

-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2011년 3월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2년부터는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별도로 통일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 경기도 통일교육 기본 방향

-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성과 축적 및 전문성 향상
- 통일 대비 행정전문인력 재교육 및 관리 체계화
- 인재개발원, 통일교육원, 지역통일교육센터 활용 극대화
-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경기도 협력 확대
- 남북한 문화적 공통점을 통한 동질화 노력
- 직장교육, 사이버 교육 등으로 공직사회에 긍정적 통일담론 형성

□ 통일교육기관 위탁교육 (*부록 p. 68 참조)

- 경기도에서는 통일교육 업무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통일교육 위탁 기관은 통일교육원,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있음. 통일교육원은 '통일 기획 요원 양성 과정', '통일 미래 지도자 과정',

‘경기도 공무원 과정’ 등의 프로그램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음.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는 ‘통일 대비 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2014년 경기도 국외통일교육 아카데미 (*부록 p. 69 참조)

-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주관으로 국외통일교육 아카데미를 진행함. 각 회별 약 30명이 참여함. 도·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대비 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함.

공직자 및 공직사회 통일비전 및 통일담론 형성

- 시군 공무원 순회 통일교육 추진
 - 시군 공무원이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 사고와 균형 잡힌 통일 소명을 갖도록 직장교육(월례조회, 포럼 1~2시간)을 실시. ‘시군 공무원 순회 통일교육’은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하며, 10개 시·군에 2,000명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도는 강사 섭외 및 강사비를 지원함. 통일교육원 교수, 관련 전문가, 통일교육원의 해외학자 초청 프로그램 등을 활용.
- 경기도 신규자 교육 중 통일교육 실시
 - 2014년 신규자 교육(14기 2,500명) 과정에 통일교육 2시간을 편성하여, 접경지인 경기도 상황을 알고 통일 비전을 갖도록 함.

도민 대상 통일문화 형성

-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남북한 상호이해 증진 과정을 소개. 주로 북한 영화, 음악, 미술, 음식, 문학 등 남북한 문화 동질화에 집중함.

-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남·북한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으며, 남북 문화재 교류 및 개성지역 문화재를 소개하는 아카데미를 후원하고 있음.

지역형 현장체험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록 p. 70 참조)

- DMZ주민아카데미 in 연천, DMZ자전거투어 등 지역형 현장체험 통일교육을 통한 접경지 생활상 소개
- 한반도통일미래센터³⁾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양성된 통일 대비 행정전문인력 활용 계획 수립 (*부록 p. 72 참조)

- 동호회 운영 및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경기도 DMZ포럼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양성된 행정전문인력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보직경로 관리

3)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일부 직영 통일체험연수시설

3. 인천광역시 사례

1)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2011년 10월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 2012년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 인천시 통일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의 건전한 통일의식 확립과 인식개선을 통한 통일 환경 기반 마련, 국가의 균형 있는 통일정책과 대북관 지향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기본 방향

-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비상대비체제 및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체계적인 안보교육 실시
- 호국·안보 현장탐방 등 체험형 프로그램, 영상자료, 사례 교육 등 피교육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방법 활용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내용

- 공무원 안보의식 고취 : 시·구·군별 실정에 맞는 안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 자체적으로 안보교육 추진계획을 수립.
- 시민 안보의식 고취 : 여성, 청소년, 민방위대원 등 각 계층을 중심으로 안보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연중 수회 실시함. 군부대 병영 체험, 영화 상영, 전시물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부록 p. 73 참조)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민관 합동 행사 (*부록 p. 73 참조)

- (사)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등과 협력하여 ‘인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2014년 6월), 평화도시 인천만들기 시민평화교육 강사단 학교(2014년 8월), 2030청년평화리더십프로젝트 “평화를 품은 백령도를 찾아서”(2014년 7월, 1박2일) 등을 진행함.
- 인천대학교와 함께 ‘2014 제8기 남북경협 인천 아카데미’(2014년 10월~12월)를 진행함.

4. 서울시 사례

1) 서울시청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 조례 제정

- 2015년 4월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제정됨.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현황

- 서울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통일 관련 민간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2012년에 통일·평화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음.
- 서울시민대학에서는 <대학연계 시민대학>의 과정으로 건국대에서 통일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국대 통일인문학은 통일의 인문적 비전을 알리는 주제들로 구성됨.

2)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별 사례⁴⁾

4)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각 구청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구청이 주최한 강좌 및 행사 목록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관련 내용을 파악하고자 서울시 전 자치구 25개구 가운데 23개구를 조사하였다.(강서구와 중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 소관행사를 찾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제외)

-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으로 의미가 깊은 해였기에 구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상됐으나 서대문구, 도봉구, 성동구, 양천구, 강동구 외는 관련 행사를 운영한 곳이 없었음. (*부록 p. 76 참조)
- 서대문구는 서대문 독립공원을 활용하여 광복 70년을 맞아 누구나 광복을 축하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문화축제를 진행함.
- 도봉구는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도봉동 대전차방호시설을 ‘평화와 문화’의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음악회를 개최함.
- 성동구는 평화·통일 행사인 ‘겨레의 소리 악(樂) 페스티벌’을 2012년부터 4회째 진행하고 있으며, ‘겨레의 소리 악(樂) 페스티벌’은 지역고유의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양천구는 자치구 지역 내에 소재한 탈북자단체 ‘평양예술단’ 공연을 연 2회 진행함.
- 강동구는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맞이하여 메르스 극복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음악회를 진행함.

〈표 3〉 자치구 평화·통일관련 행사

자치구	프로그램	기간
서대문구	2015 서대문독립민주축제	‘15.8월
도봉구	광복70 분단70 시민공유 작은음악회	‘15.9월
성동구	겨레의 소리 악(樂) 페스티벌	‘15.10월
양천구	평양예술단(양천구 소재 탈북자단체) 공연	‘15.2월,9월
강동구	광복 70주년, 메르스 치유 찾아가는 음악회	‘15.7월

5. 독일의 사례

□ 서독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등을 실시함

- 서독은 분단 이후 성취한 자본주의적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교육은 과거 독일의 국수적이고 폭력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과거 '나찌즘' 등 전체주의를 반대하는 정치교육을 진행하였고, 그 속에서 통일교육보다는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이 진행됨.

□ 1970년대부터 통일정책과 밀접한 통일관련 내용의 교육을 진행

- 1973년 사회교과서 개정: 동독 교과서 미개정에도 불구하고, 동독을 인정하는 사회교과서를 발행함.
-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은 공산주의 정당이 총괄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주입하고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⁵⁾
- 그럼에도 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사회교과서를 개정하여 통일관련 교육의 내용을 강화함. 개정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동독의 체제 비판 내용의 비중이 높았으나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동독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크게 줄이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하였음.

5) 김창환, “통일 전 동서독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과 실상,” 『한독교육학연구』 Vol. 8, No. 1(서울: 한독교육학회, 2003), p. 29 : “통일 전 동독 정부가 추진하였던 통일정책은 통일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 기본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통일교육정책은 공산주의 정당이 총괄하였다는 점이다. 교육행정기관은 단지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였다. 둘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그것의 사상적 우월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셋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의 실패인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희생 헌신하고, 서독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제국주의 이념과 논쟁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넷째, 이를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 1978년 서독의 11개주 문교부장관들이 합의한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에서는 독일 통일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학교 수업이 강조되었음.⁶⁾

<표 4> 서독 ‘사회’교과서의 동독관련 내용 비교

	1970년 교과서	1973년 교과서
동독 국가호칭	총부 독일에 위치한 소련 점령지	독일민주공화국(DDR)
동독 선거제도	○“선거 없이” ○“보통 강제 선거” ○“선거인은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다” ○“강요로 인해 선거 참여율은 대단히 높고, 찬성비율도 99%로 대단히 높다”	○“선거 없이” ○“찬반투표” ○ 삭제 ○ 삭제
동독헌법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은 이름만 민주주의적이다” ○“동독의 사이비 민주주의적인 헌법 규정은 현저히 모순적이다”	○ 삭제 ○ 삭제
동독정치	○“독일사회당(SED)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 삭제
동독 국가소개		○ 동독 국가제도(행정부, 입법부 등) 객관적으로 소개 ○ 동독 국가(國歌) 전문 소개 ○ 동독 의회 선거결과 소개 ○ 동독 지리(면적, 인구) 소개
동독 사회건설	○ 국경 철조망 설치 ○ 교회와의 투쟁 시작 ○ 공산주의 경제 도입 ○ 결과 : 난민 및 서독으로의 이주자 급증	○ 토지 개혁 및 국유화 ○ 기업의 국유화
동독의 소련화	○ 1960년 이후 “사회주의 건설”이 강력하고 무자비하게 추진됨	○ 삭제
1968년 제정된 동독헌법		○ 헌법의 서문 소개
DDR의 소련 동맹체제로의 편입과정	○ 동독의 편입과정 소개	○ 동독의 동구권 편입과 서독의 서구권 편입과정 비교 서술 ○ 동서독의 군대 비교 ○ 서독의 동방정책 소개
독일 통일	○ 독일 제국을 잇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입장 ○ 공산주의 정권의 입장 ○ 동독의 입장 변화 : 1국가론에서 2국가론	○ 동서독의 독일 통일 관련 헌법 비교 ○ 동서독의 성명서, 인터뷰 비교 ○ 통일과 외교정책과의 관련성 소개

출처: 김창환, “통일 전 동·서독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과 실상,” 『한독교육학연구』 Vol. 8, No. 1(서울: 한독교육학회, 2003), p. 26.

6) “평화와 자유의 이념 안에서 독일 통일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동독과 동독 주민과 동독의 발전과정을 아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이다. 당장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나,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 독일 통일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무엇보다 학교가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독일 문제는 모든 학교 수업에서 확고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3. November 1978”,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1979, S. 245-256.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독일 통일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함

-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독일 통일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통일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통해 통일 기반을 구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1950년대부터 베를린을 중심으로 내독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3년 베를린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동서독 왕래를 재추진하였음.
- 1957년~1966년 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베를린을 통해 축적된 동서독 교류의 정책적 경험을 총리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독일에 크게 기여한 동방정책을 주도함.

〈표 5〉 독일 통일정책 실행과정의 단계와 특성

연도	단계	특징
1949 ~ 1963	관계단절 단계	‘힐슈타인 원칙’에 의한 상대방 부정의 적대적 관계, 그럼에도 1951년 경제 및 무역에 관한 베를린 협정으로 경제교류(민간기관 독일상공회의소와 동독 정부 간의 내독거래 형태), 서베를린에 동독전문상점 존재
1963 ~ 1969	관계정상화 모색	서베를린시장 빌리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에도 1963년 서베를린과 동독 간의 출입증명서 합의
1969 ~ 1982	관계정상화 및 교류협력 단계	서독 사민당 빌리 브란트의 집권으로 ‘1민족 2국가론’의 동방정책 수립,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 1972년 동서독 정부의 ‘기본조약’으로 동독에 대한 사실상의 인정(물론, 법적 인정은 아님)
1982 ~ 1989	교류협력의 활성화 단계	1982년 기민당 콜 총리 집권에도 대규모 차관 제공, 1986년부터 서독과 동독의 62개 도시 간의 자매결연 활성화: 1988년 9월 베를린 스파다우 지역과 나우엔, 베를린 첼렌도르피 지역과 코닉스-부스테르하우젠 지역 자매결연(모두 베를린 인접 지역)

6. 총평

한반도 평화·통일 교육은 스스로 만들어야 함

- 1961년 베를린에 장벽이 설치되어 동서독의 교류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서베를린시(당시 시장은 빌리 브란트)가 추진한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 등이 제한적이지만 동서독 방문을 재개시킴. 이러한 서베를린의 교류 경험이 1970년대 이후 서독 전체의 통일정책이 된 ‘동방정책’의 배경이 되어 독일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베를린의 역할은 매우 컸음.
- 그러나 서독에서는 전체주의를 타파하는 민주시민교육이나 평화교육이 주로 존재하였고, 동독과의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전문적인 통일교육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통일교육 필요

- 통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도민 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일교육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존 통일교육원 중심의 교육은 전문적인 통일교육 개발과 실행에 기여를 하였지만,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의 주입으로 다양한 이해와 특성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 차원에서 지역이나 직능 차원의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서울시 차원의 특성화된 평화·통일 교육 중요

- 서울시민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역사와 위상에서 비롯되는 평화·통일의 중요성 등이 담겨진 시 차원의 특성화된 평화·통일교육을 개발해야 함.

서울시의 평화·통일 관련 자원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 소재 통일관련 단체들의 통일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각 구청별로 진행되는 평화·통일 교육의 부재 등에서 나타나듯이 각 자치구 차원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경기도의 민통선 마을 활용처럼 서울에서도 평화·통일 관련 상징공간을 발굴하여 서울 시민들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서 직접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서울시, 자치구, 시민단체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차원의 통일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네트워크나 거버넌스 등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평화·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이에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III.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구상

1. 서울시 특성과 평화·통일교육

1) 서울의 역사적 위상과 평화·통일

경제적 집중도가 높은 천만명의 대한민국 수도

-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5백년 역사적 도읍지인 서울시는 ‘한강의 기적’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도시이며, 대한민국 면적 0.6%에도 불구하고 GDP의 21%가 집중되어 있는 거대 경제도시

〈표 6〉 서울특별시에 대한 경제적 집중도

구분	국내총생산 (10억원)	사업체 수 (개소)	은행예금 (10억원)	내국세 (10억원)	의료기관 (개소)	자동차수 (천대)	대학교 (개소)
전국	581,516	3,131,963	512,419	82,226	44,029	13,949	180
서울	127,175	735,258	259,355	35,436	12,396	2,691	42
집중도 (%)	21.87	23.48	50.61	43.1	28.15	19.29	23.33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국제도시이자 민주주의 도시

- 88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한류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제도시이자, 4.19혁명, 6월 항쟁 등 민주주의 도시

군사적 분쟁지역 인근 세계 유일의 대도시

- 대부분 국가의 경계선이 지방 변경지역에 설정되는 것7)과 달리 한반도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베를린처럼 강대국

의 정치적 분할에 따라서 한반도의 중심지역을 관통하는 38선으로 한반도가 분단되었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km 떨어져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의 위협권⁸⁾에 위치하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소가 존재

<그림 1> 서울특별시의 특성



7) 김민환, “경계의 섬과 포격전의 기억,” 『사회와 역사』 통권 104호(서울: 한국사회사학회, 2014), p. 46 참조.

8) “남북한이 전쟁을 벌일 경우를 상정한 위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해는 2004년 합동참모본부에서 실시한 ‘남북군사력 평가 연구’에서도 다시 산출됐다. 이때는 10년 전 추정정보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전쟁 피해가 예상됐다. 즉 한반도 발발 이후 24시간 이내에 수도권 시민과 국군, 주한 미군을 포함한 사상자가 1994년 추정치 150만 명에서 230여 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나왔다. 첨단무기로 무장한 한·미 연합군이 전쟁 초기에 이처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스스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이 바로 전선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은 개전 초기 1만2000여 문의 포로 시간당 포탄 50만 발을 쏟아붓는다. 그중 장사정포 1000여 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낡고 사정거리가 짧은 박격포라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군 당국은 평가한다.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장사정포로, 북한군은 170mm 자주포 6개 대대(550여 문)와 240mm 방사포 11개 대대(440여 문)를 운영한다. 각각 사정거리 70km와 50km인 두 장사정포는 대부분 남한 수도권과 가까운 휴전선 10km 이내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은 물론 수원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사정포는 전쟁 초기에 시간당 2만 4000여 발을 서울에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것이 주한 미군의 평가다. 장사정포 사격에 의한 대규모 인명 및 시설 피해는 포탄 폭발에 의한 직접 피해보다 서울과 수도권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각종 가스관과 유류 저장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이 파괴되면서 초래할 2차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IN>, 2010년 5월 31일자,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하루 만에 240만 명 사상,” 참조.

2) 서울의 역할

- 역사적 도읍지라는 상징과 경제도시, 국제도시, 민주도시, 군사적 분쟁지역 인근 도시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평화수도 서울을 준비해 나가야함.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은 평화통일의 진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의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옴.
- 한반도의 분단으로 군사적 분쟁지역 인근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대도시로서 분쟁과 갈등의 악조건을 화해와 협력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시적 상징성이 존재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유산을 계승한 도시로서 통일시대에 맞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함. 인구 천만의 대도시로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시민권의 향상과 평화·통일 의식을 함양해야 함.

3)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수요

- 통일은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는 결과인 동시에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출발이라는 양면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70년 넘게 지속해 온 적대적 대타성이 극복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이질적인 체제 하에서 생활했던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국가의 새로운 체제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평화·통일 교육이 필요함.
- 기존의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평화·통일 교육 방식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⁹⁾ 통일이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9)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서울시민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2014 서울

효과가 있어야 통일에 대한 동력이 발생할 수 있음.

-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다문화성을 고려할 때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제도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요소들을 고려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 가치관, 정서, 정체성 등의 '비제도적 통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통일한국의 사회 통합에서는 미시적이고 문화적 통합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 사회통합의 미시적이고 문화적인 통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성에 바탕을 두고, 제도의 통합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 모든 세대가 즐겁게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교육이 필요함. 강의실에서서의 주입식 강의가 아닌 분단현장을 성찰하고, 통일 미래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평화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체험형 교육 등을 통해 '강요되는 통일'이 아닌 '미래를 위한 기획으로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¹⁰⁾ 정부에서는 통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의 통일교육은 전문가를 위한 교육이었고, 다수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교육이었음.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함. (*부록 p. 78 참조)
-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구 및 마을로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이 필요함. 서울시가 지원하고 자치구 마을 단위 평화·통일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실행하는 평화·통일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평화·통일교육에서도 서울시·자치구·시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함.

-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서 교육전달자로서 교육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양성에 대한 요구가 있음. 강사 육성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특성에 맞게 평화·통일 교육을 새롭게 기획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교육을 추진시킬 수 있는 리더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¹¹⁾ (*부록 p. 80 참조)
- 새롭게 요구되는 평화·통일교육의 흐름에 기초하여 분단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 시민의 특성과 위상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특별시의회 연구용역보고서』(서울: 서울특별시의회, 2014), p. 130~135, 참조.

10)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의 인터뷰 자문내용

11) 정현숙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의 인터뷰 자문내용

2.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1)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 원칙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 서울시의 평화·통일교육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의 원칙을 반영한 계획이어야 함. 따라서 본 계획은 평화·통일교육의 목적으로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을 통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고자 함.

자주·평화·민주

-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은 1989년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의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도 천명되어 있는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맞추어져야 함.

서울시의 안전과 번영

- 서울시 평화·통일교육은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서울시민들의 요구와 그에 따른 서울시의 특성과 역할에 적합한 평화·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함.

정치적·당파적 목적의 배제

- 서울시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제정된 만큼 통일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한 정치적·당파적인 목적이 배제된 통일교육의 방향에 맞추어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목표로 함.

2)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의 추진 목표

평화문화를 추구하는 시민의식 함양

- 서울시 평화·통일교육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춘 시민상'을 목표로 함.
-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 남북의 문화적 소통과 상호 이해증진은 중요한 요소임. 통일시대의 여러 문제 중에서도 문화 분야의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정치적 통일, 경제적 통일과 달리 문화적 통합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편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다른 문화를 온전히 통합할 수 없음. 정치제도나 경제제도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갈 수 있지만 문화는 소통과정 없이 통합에 온전히 이를 수 없음.
- 정치제도나 경제제도의 이식은 단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지만 제도 정착 과정에서는 거부감과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경제적 비용의 몇 십배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어 사회발전의 가장 큰 불안정한 요소가 될 것임. 통일 독일의 경우에도 심각한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음.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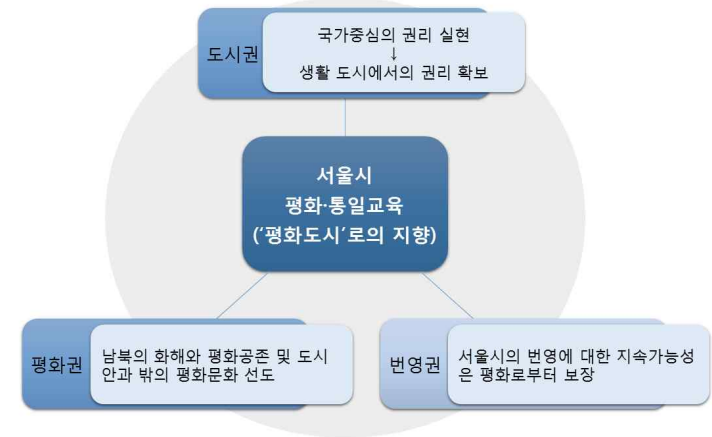
12) 독일의 경우 통일된 지 10년 만에 동독주민의 경제적 수준이 서독 주민의 80%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지만 독일통일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통일 독일의 내적인 장벽은 오히려 더 높게 형성되었다. '무능한 동쪽사람(Ossis)'와 '오만한 서쪽(Wessis)'이라는 의식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 통일직후에 나타난 동서독인의 거리감이 20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독일 통일의 경험이 재연될 여지가 매우 높은 만큼 시민의식 형성을 통한 동질성 회복이 절실하다.

- 이를 극복하고자 서울시의 평화·통일교육은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서울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도시 실현

-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함. 산업화와 민주화의 도시 서울시는 분단을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평화도시로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기존 국가 중심의 시민권에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이해와 권리’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도시권의 등장 이후, 2000년 바르셀로나, 2005년 몬트리올 등에서 도시권을 반영한 ‘도시헌장’을 발표하면서 도시의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
- 도시헌장에는 도시 안에서 여성들의 안전 등을 목표로 하는 ‘안전’ 조항이 담겨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 안과 밖의 안전을 포괄하여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평화도시’¹³⁾의 개념을 평화·통일 교육의 내용에 담아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가야 함.

〈그림 2〉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평화·통일교육



- 또한 도시헌장은 시민들의 ‘번영에 대한 권리’로 ‘지속가능한 발전’ 조항을 담고 있음.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서울의 지속가능한 번영은 한반도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서울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면서 ‘번영에 대한 요구’가 ‘평화에 대한 요구’와 직결되어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평화문화의 창출이 서울의 번영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라는 사고를 고양시켜야 함.

□ 평화·통일 교육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의 대중적 활성화, 그리고 체계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와 통일을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양성, 평화·통일의 내

13) 평화도시를 “주체적인 평화활동을 표방하는 도시의 정책 또는 발전전략 측면”이라고 파악한다. “대부분의 평화도시나 그들의 네트워크는 아직은 반전평화가 중심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적극적 평화와 인간안보 개념의 실천을 중심으로 삼는다.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대표적인 평화도시는 다음과 같은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과거 전쟁의 격전지였거나 분쟁지역의 경험이 있는 도시, 둘째는 평화와 관련된 국제회의 및 기구의 유지로 유명한 도시들이다.” 강승호, “인천 평화도시 구상에 관한 연구,” 『IDI연구보고서』 2011년 5월(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11), pp. 16~17; 또한 이미 국내의 수원, 제주, 과주 등 3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북경, 동경, 바르셀로나 등 세계 110개 도시가 속한 국제평화사절도시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 Messenger Cities: IAPMC)의 헌장에서는 평화도시를 “평화문화를 지향하는 도시”라고 규정한다. 이 단체는 1986년 유엔경제사회위원회 특별자문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지자체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국제평화, 비핵화, 빈곤퇴치, 환경보호, 지역 및 계층 간 균형 발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2014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제평화사절 도시연합회에 인천을 가입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용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현재의 통일교육은 단순 지원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나 보완, 구조적인 교육지원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통일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교육 이후의 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적 자원의 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적실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3. 서울시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서울시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성찰”, “남북 관계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울시의 역할”, “통일 미래를 위한 가치 설계”로 규정할 수 있음. 이러한 방향은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평화문화를 증진하고, 서울시민들의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킴.

1) 한반도 분단에 대한 성찰

분단문제의 구조적 인식

- 한반도 분단이 지속되면서 분단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자각성이 낮아진 상황임. 한반도의 긴장이 상시적이고,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평화의식의 함양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한반도 분단 구조 아래 진행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삼아 나가야 함.
- 우리 사회 내면에 자리 잡은 분단문제의 구조적 인식이 필요함. 분단은 단순히 정치적 상황에 그치지 않고, 분단체제 속에서 우리 사회 내면으로 자리 잡았음. 다양성의 존중과 상호 이해의 문제는 남북 분단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내면의 문제임.

독일의 사례

- 통일독일의 사회통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서독 주민의 불신이었음.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각인 효과’, ‘사회주의 추락의 경험’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

-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각인 효과’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체화된 강력한 ‘사회적 지향’이 동독인들의 ‘불변적인 가치모형’으로 온존하게 유지되는 것임.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던 규범적 표준들이 통일 후에 새로운 사회질서 하에서도 신속하게 바뀌지 않고 계속 작동하고 있어서 독일 통일 이후에도 문화적 갈등과 가치관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로 표출되었음.
- ‘사회주의 추락의 경험’이란 서독의 제도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과 신속한 체제전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실 경험’을 겪게 되면서 사회주의 가치관에 대한 가치가 평가 절하되면서 동독인의 자부심에 대한 손상이 발생하게 된 것임.
- 남북한은 식민 상태에서 전혀 이질적인 정치체제로 전환되면서 근대화의 경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곧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문화적 차이에 더하여 전쟁을 통해 상호적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었고, 이러한 체제 차이와 적대감은 통일 이후에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요소가 되고 있음.

2)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울시의 역할

□ 북한사회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필요

- 평화·통일교육은 남북관계 현안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올바른 이해 없는 통일교육은 무목적적인 적대감의 반복이나 북한에 대한 막연한 지원으로 환원될 수 있음.
- 자율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의 획일화되고 이념성이 짙은 문화를 접하면서 북한에 대한 거부

감이 형성되어 있음. 거부 반응에 이어 북한 문화에 대한 가치 절하가 일어날 것이고, 북한의 문화나 제도에 대해서는 열등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음. 올바른 문화이해는 문화적 현상,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면적 이해를 의미하는 만큼, 북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사회적 맥락읽기가 가능하도록 교육되어야 함.

-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함. 이는 통일로 가는 과정이 남북과 함께 주변국가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임.

□ 분단의 구조를 통합의 구조로 전환

- 서울시의 역사와 특성에 기초하여 서울시 차원의 특성화된 평화·통일 교육 내용을 설계해야함.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가 5백년 도읍으로서 역사적으로 쌓아온 정치, 경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평화도시로의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음.
-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일교육, 통합의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남북통합지수’를 보면 남북한의 통합정도를 수치로 표시할 경우 통합수준은 20% 정도로 나타났음.¹⁴⁾ 이 정도의 낮은 통합수준 상태에서는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이 대단히 어려울 것임을 시사함.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분단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당위성을 현실성으로, 분단의 구조를 통합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특성화된 평화·통일 교육이 필요함.

14) 남북통합지수를 기초로 2014년 현재 남북한의 통합률은 20.6% 수준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남북통합지수』(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 8 참조.

3) 통일 미래를 위한 가치 설계

□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

- 통일 이후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통일은 어느 한 편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이식되는 상황을 지양해야 함. 정치적 제도나 경제적 제도와 달리 문화는 다양성을 기초로 해야 함. 통일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접촉이 일어날 것임.¹⁵⁾
- 남과 북의 문화가 만나는 과정이 반드시 순조로운 것은 아님. 문화 접촉 과정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 특히 전체적인 문화접촉이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화적 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함.

□ 동북아평화와 한반도 통일과제를 통합하는 평화도시

- 서울시의 평화·통일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인권과 행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21세기형 평화를 실현하여야 함.
-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은 평화를 통해 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함.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과 통일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동북아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과제를 통합하는 분단국가 수

도로서의 서울형 평화·통일 교육’이어야 함.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의 공간적 범위를 동북아로 확장하여, 서울시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는 ‘평화통일 상징도시’로 부상시켜야 함.

-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 문제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평화적 설계가 필요. 평화·통일을 위한 가치 설계에서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분단트라우마¹⁶⁾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남북의 경우에는 충분한 문화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문화적 통합과 이해, 통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15)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것은 문화전파와 문화이식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문화전파(diffusion)는 한 문화의 요소나 특성들이 다른 문화로 번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이식(cultural acculturation)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로 영향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우영, 『북한문화의 수용실태조사』(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2 : “서로 다른 문화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화(diffusion)와 문화이식(cultural acculturation)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화 이 문화변동으로 이어지는 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역사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경우 두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문화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더욱 많다.”

16) 남북의 분단은 정치적 분단을 넘어 문화적 분단을 의미하였으며, 분단이 분단 구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일상적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남북의 분단은 분단 기억을 내면화된 잠재적 상처, 사회적 무의식이라는 ‘분단트라우마’로 남겨서 적대적 시각을 생성해왔다. 분단트라우마에 대한 진단과 치유를 통해 문화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분단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분단트라우마와 치유의 길』(서울: 경진, 2015), 참고.

<표 7>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

비전	평화도시 서울이 선도하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		
핵심 원칙	자주·평화·민주	남북 화해와 공존	서울시 안전과 번영
목표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시민의식 함양	지속적인 평화·통일교육 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평화도시 지향
기본 방향	분단에 대한 성찰	남북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울시의 역할	통일 미래를 위한 가치 설계
추진 전략	【맞춤형】 -서울시 및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 스토리텔링 개발 -참여자들의 수요를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계층별 스마트 교육 -맞춤형 교재 개발 (출판물, 영상물)	【참여형】 -체험형, 문화예술행사형 평화·통일교육 -거주지 서울의 평화·통일 상징 공간 발굴을 통한 참여 확산 -마을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인프라 활용)	【거버넌스형】 -서울시·자치구·시민단체가 평화·통일교육 민관 거버넌스 구축 -평화·통일 퍼실리테이터(평화해설사) 양성
추진 체계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추진위원회 ▲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획단		

IV.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1.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과정

1)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의 5단계

서울시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역사성과 통일한국 미래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시민의식 함양을 기본 목표로 구성되어야 함. 분단 극복과 통일은 예상되는 슬한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간단치 않은 과정임. 전쟁의 체험과 이념 대립이 빚은 적대감과 증오,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 문화의 격차와 갈등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상당한 장애로 작동할 것임.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통일 교육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임. 기존의 논의와 달리 한반도 분단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확고한 평화인식과 남북 주민의 인간적 삶이라는 시민권의 바탕 아래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어야 함.

□ 1단계 수요분석

- 관련 분야의 필요한 교육 내용과 요구를 분석함. 서울 지역별로 관심 분야가 다를 수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음. 지역적 특성과 평화·통일의 수요도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해서 최적의 교육을 설계함.

□ 2단계 교육 설계

- 교육설계는 도출된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을 산출하여 구성하고, 교수법과 전략, 수업매체 그리고 평가도구에 관한 전반적인 설계를 진행함.

3단계 교안 개발

- 교육 과정에서 다룰 세부적인 주제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개발함.

4단계 교육진행

- 교과과정과 수업지도안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며,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5단계 교육평가

- 행사의 질적 제고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교육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목표와 운영 방식,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설문조사, 참여자 평가, 진행자 평가, 집단평가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함.
- 프로그램의 평가 내용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함.
- 평가는 2단계로 나누어서 1차적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각각의 강의 내용과 장단점, 강의 후기, 강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게 된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차적으로는 행사 관계자들과 평가를 진행함.
- 강의 평가에서는 강의 내용과 강의 방식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듣고 싶은 강좌나 주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2.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맞춤형 개발

1) 서울시 및 자치구의 특성이 반영된 평화·통일교육

서울시의 지역 자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교육

- 평화·통일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통일 자산을 활용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함. 지역별 평화통일 자산을 발굴하고,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서울시민이 생활 속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과 연계한 생활 친화적 평화·통일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역사에서 수도 서울은 남북의 치열한 이념 대립의 최전선에 있는 역사의 도시임. 따라서 서울에는 분단과 전쟁을 상징하는 역사적 산물과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정치적 공간이 많이 남아 있음. 통일 미래를 위한 기획으로서 분단의 상처를 통합의 동력으로 환원할 수 있는 내적 자산을 찾아내는 교육이 되어야 함.
- 한강인도교, 전쟁기념관, 서대문형무소, 마포나루터 등 서울시에 존재하는 평화·통일 관련 문화적 상징공간을 개발함.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자신의 거주지역에 평화·통일과 관련된 상징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기회를 높임.
- 예를 들어 지금은 분단으로 소멸된 나루터를 지녔던 마포구의 경우에는 한강 하구와 연결하여 서해안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포 나루터 역사유적지 조성 등 평화·통일의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여 특성화된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함.

평화·통일 관련 문화적 상징공간 개발과 관광프로그램화

- 지역의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관광콘텐츠로 기능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평화·통일의 긍정적인 영향이 확산되도록 함.
- 지역의 평화·통일 관련 상징공간을 활용하여 개발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을 서울시의 관광 사업과 연결하여 소개함으로써 특히, 외국인들이 지닌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서울시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평화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음.

2) 참여자들의 시간적 수요를 고려한 교육

시간 수요를 고려하여 장·단기 프로그램 개발

- 참여자의 시간적 여건을 고려한 교육을 개발하여 기존의 평화·통일 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평화·통일교육을 전달함.
- 바쁜 생활여건으로 인해서 단기 평화·통일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중심으로 1회 특강 형식이나 '1일 평화통일투어' 등의 체험형 방식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함.
- 평화·통일 교육에 대해 장기 강좌를 희망하는 참여자에게는 주제의 집중화, 다양화를 통해 분기나 반년, 연간 단위의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함.
- 서울시의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적 소양 교육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심화형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심화형 교육은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교양의 심화 과정으로 기존의 평화통일 교육의 내용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함. 심화형 평화·통일 교육은 통일교육원, 서울시민대학 등과 연계하여 평화통일 심화과정과 평화해설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평화통일 마일리지 도입

- 평화통일 관련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좌별로 마일리를 적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성취도를 높임.
-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마일리를 통해, 높은 마일리를 축적한 학생에게 시상을 함. 일반인의 경우에는 평화통일 마일리지 통장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일정 이상의 시간을 이수하면 평화해설사 양성에 우선권을 주어서 성취동기를 높임.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민대학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며,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 학점취득제와 연계하여 운영함.

3) 참여자의 직업 및 계층적 특성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대상에 따른 생활밀착형 교육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익숙하게 생각했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성찰하게 하고, 나의 평화와 안전이 통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 그 동안의 통일교육에서는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거시적 차원의 통일 담론 중심으로 이끌어 왔고 거창하게 논의된 나머지, 통일이 개인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음. 통일이라면 당연히 생각되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 관점의 통일담론이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성찰하도록 함. 이를 통해 통일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인식을 깨워주어야 함. 개인의 삶은 통일과 불가결한 요소이며, 진정한 평화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 교육이 국가의 문제나 경제적 편익의 문제¹⁷⁾만이 아니라, 시민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학부모 등의 평화·통일 교육에 있어서는 기존의 통일교육원의 사이버교육 체계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마을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합시켜서 진행함.
 - 광진정보도서관은 통일교육과 글쓰기를 연계한 청소년글쓰기교육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한 바 있음.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도서관에서 통일문제를 논술과 연관 지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평화교육의 확산이라는 의미를 창출함.
 - 지역의 대학이나 관련 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화·통일 교육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야 함.
- 지자체 의원들과 서울시 공무원, 연계기관 직원(예: 서울메트로) 등 서울의 주요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특성과 그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평화·통일 교육 특강 등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17) 통일에 대한 여러 관점이 제시되면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통일편익론도 새로운 통일 인식론의 하나이다. 통일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내수시장을 키우고, 군사비를 투자비로 전환시키며, 또한 7천만 민족이 힘을 합쳐 국제경쟁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취업의 기회도 확대되며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도 향상된다는 논리다. 통일이 가져올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통일 편익론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일편익론은 남북 공통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통일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남북화해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일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국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4)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교재개발

□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교재개발

- 서울시의 평화·통일 개념에 맞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함. 통일교육의 세분화와 스마트형 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지역 및 직업적 특색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평화·통일 교재는 비주얼 매체를 중심으로 시민친화적인 내용과 지역 및 직업연계형으로 제작되어 현장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평화통일 교재는 인쇄물과 함께 영상물로 제작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개발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및 계층별 타겟을 설정하여 차별화된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3.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형 개발

1) 체험형 및 문화·예술 행사형의 평화·통일 교육

□ 참여형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 서울시의 평화·통일 교육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함. 체험형의 교육이나 과제 해결형의 교육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교육콘텐츠로서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행사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함.
- 목적과 목표에 맞추어 대상에 적절한 교육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함. 효율적인 단기강좌를 희망하는 참여자 및 단체에게는 서울시와 구청, 단체 차원의 강연, 1박 2일 워크숍 등을 진행하면서 강의 중심의 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진행하도록 함.
-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의미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길 위의 인문학’¹⁸⁾, ‘도서관 교육’, ‘박물관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18) 답사프로그램은 ‘길위의 인문학’을 참고하여 기획하였다. ‘길 위의 인문학’은 전국도서관협회에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다. 강의실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관련 분야의 인문학 강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길 위의 인문학’은 현장을 찾아서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정한 공간을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일문제에 적용해보자는 취지였다. 동일한 공간 속에서도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가 있음을 경험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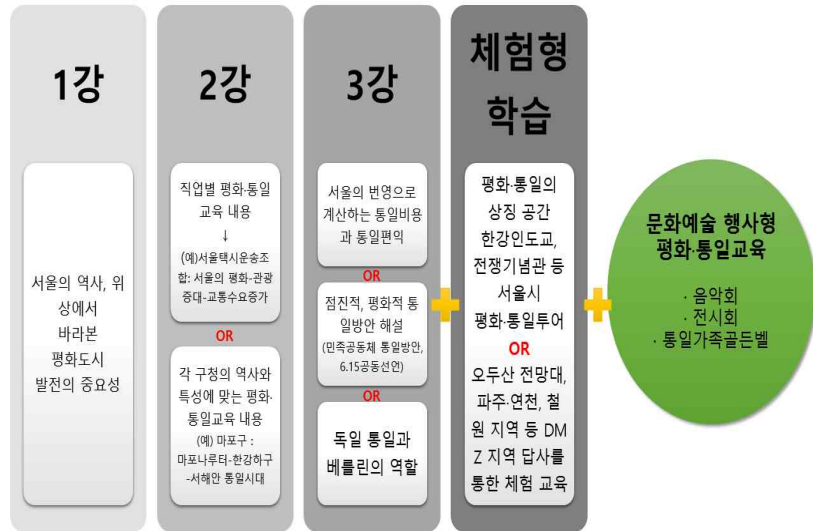
□ 참여형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 강의는 핵심적으로 압축하여 진행하고, 한강인도교, 전쟁기념관 등과 민통선 답사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통일과 분단의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평화·통일 교육을 전개함. 또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사의 참여과정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는 평화·통일 교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행사 형식의 평화·통일 교육을 실행함.
- 서울시 ‘평화·통일 투어’ 개발: 근현대 서울의 과거 분쟁사를 평화·통일 관련 문화적 상징공간으로 엮어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함. 일례로 한국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 폭파사건은 남과 북에서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강 인도교였던 한강대교와 용산 전쟁기념관 등을 연결하는 평화·통일 교육 공간을 조성함.

□ 참여형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 체험행사의 질적 제고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교육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목표와 운영 방식,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

<그림 3> 1교육 + 1행사 형식의 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 어린이대공원 등을 비롯하여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에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나가야 함. 건국대에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어린이대공원 야외무대에서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음악회를 어린이대공원 가을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음.

2) 마을로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민밀착형 교육

- 서울시 각 지역의 관련 시설 인프라와 연계한 생활친화적인 교육 설계. 지역의 도서관, 박물관을 비롯하여 지역의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
- 서울시 관련 기관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홍보와 지원체계를 구분하여, 서울시에서는 홍보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인프라 사용을 지원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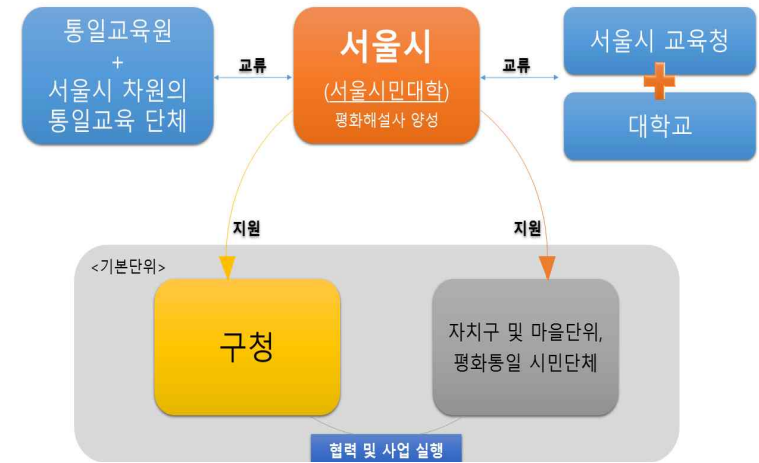
4.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거버넌스형 개발

1) 서울시-자치구-시민단체 평화·통일 교육 거버넌스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참여 활성화

- 서울시의 평화·통일 교육은 기존의 정치, 경제적 논의에서 확장하여 시민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지역의 성숙한 미래를 위한 가치로서 수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세밀한 정책기획과 로드맵에 근거하여 설계되어야 함.
-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청,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 직능단체, 학교, 교육청, 통일교육원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서울시 차원의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수요에 최대한 맞추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규모로 볼 때 서울시 차원의 학생(2014년 현재 서울지역 초등, 중등, 고등학교 1,302개와 학생 약 117만여 명), 교사 연수 등의 교육 수요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평화·통일 관련 시민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통일 교육을 전개해야 함.
-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와 마을 단위에 있는 평화·통일 관련 시민단체, 평화통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능별 전문인을 포함시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서울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

<그림 4>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2) 평화·통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평화해설사' 양성)

□ 가치의 실천자로서의 평화해설사 양성

- 서울시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민간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지원할 퍼실리테이터가 양성되어야 함. 서울시의 평화해설사 교육과정은 시민을 평화교육 주체로 양성하는 과정으로 시민평화활동가의 배출 창구임.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가치의 실천자이자, 사회봉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해설사로 양성해 나감으로써 서울시의 평화·통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함.
-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해설사 양성 사업을 통해서 평화해설사가 서울시의 평화·통일 교육의 목표인 '한반도 분

단에 대한 성찰',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일미래를 위한 가치 설계' 등을 도모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을 갖추고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능동적으로 현장강의 및 교육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들을 통해서 기존의 통일논의가 민족사적 당위론에 근거한 통일론이나 실용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에 더해 인간적 삶의 문제, 분단으로 인해 받았던 고통을 해소하는 문화적 차원에 근거한 가치를 발견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참여 촉진

- 서울시의 평화·통일교육은 참여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새로운 개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활 현장에 맞는 교육전파차로서 '평화해설가'의 양성이 필요함.
- 현재 통일교육원에서는 한 달 과정으로서 눈높이 통일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으며, (사)새조위에서는 통일코디네이터 양성, 하나재단에서는 민간교육 자격으로서 정착지원전문가를 위한 자격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 내용과 과정이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민대학 프로그램에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평화해설사' 양성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들의 참여와 각 자치구 및 마을의 상황에 맞게 평화·통일 교육을 기획, 추진하도록 마을 단위의 평화·통일관련 단체 활동가와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집, 교육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함.

- '평화해설사' 양성과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평적이고, 균등주의적인 평화·통일교육에서 나아가 분야별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심화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함.

- 심화 프로그램으로 정책결정자, 평화통일교육 강사 양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진행함. 주요 교육내용은 서울시의 평화·통일의 의미를 보편적 세계시민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교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 평화·통일 인력으로서 평화해설사는 정치의식, 시민의식, 시민교양,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평화·통일교육 해설사로 자격을 갖추어 나가야 함.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능력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정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평화·통일교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일반인과 함께 북한 및 통일 관련 대학생, 대학원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지역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함.¹⁹⁾

19) '평화해설사' 자격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홍사단의 강사인증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홍사단의 민주시민교육지도사 강사인증제도에서 "민주시민교육지도사는 퍼실리테이터(촉진자)의 진행능력을 통해 교육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묶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한 참가자의 마음열기, 기대나누기, 동기유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원탁토의, 쟁점토론 등의 퍼실리테이터 역할, 다양한 회의운영(마인드맵, 신호등토론,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등) 능력 개발,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관점, 강의기법 등의 역할을 기획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홍사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민주시민교육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토론과 퍼실리테이터, 민주시민교육의 철학, 민주시민교육방법론의 이해분야에 대한 이론시험과 발표력, 조정능력에 대한 진행 실습과 가치에 대한 이해, 개인의 비전, 기획능력 분야에 대한 면접의 실기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한 후 5년이며, 자격 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홍사단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체계, 예산

1.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추진전략

1)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구성

평화도시 서울이 선도하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

-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목표로서 '평화도시 서울이 선도하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로 규정함.
-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화·통일 교육의 주된 내용은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한 성찰',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울시의 역할', '통일 미래를 위한 가치 설계와 시민의식'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사업내용을 마련함.
- 관습적으로 일상 속에 자리 잡은 분단문제를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인식하고, 통일 미래를 위한 평화도시로서 서울시의 가치체계를 확산함.
- 남북한 시민의식과 가치관, 동질성 수준이 교육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차별화시켜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차별화된 교육내용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구조화·제열화시키는 교육체계를 마련함.

-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 사업으로는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사업', '참여형 평화·통일교육 사업', '거버넌스형 평화·통일교육 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개발하고 진행함.
- 서울시의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위탁이나 공모를 통한 분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산 배분의 형식논리를 탈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평화통일교육 성과가 미미한 '개점 휴업' 상태의 단체에 단체 유지용 사업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음.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낮고, 사회적 통합 기여도가 낮아서 교육 사업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예산 확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의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 동원방식의 일회적, 이벤트적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사업 진행에 대한 검증이나 통제에 어려움이 있음.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임.
- 교육대상의 특성과 교육내용의 구조적 차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교육전략(공직적 집합교육, 일상적 삶과 함께 병행하는 비공직적 화합교육, 통일교육 유관단체의 사회교육 등)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수립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 교육과 함께 '평화·통일교육 인력양성 및 통일교재 개발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함.

2) 단계별 추진전략

1단계 :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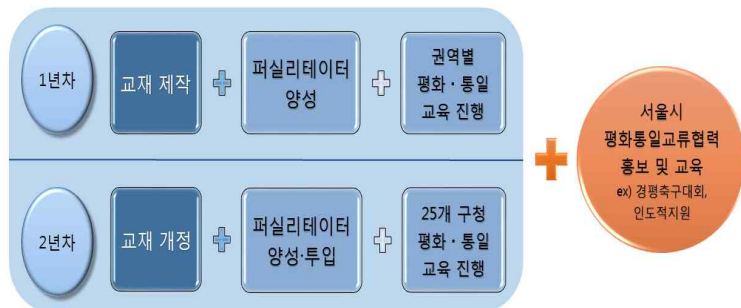
- 서울시민대학에 평화·통일 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시범적으로 서울시 권역별 접근방식을 통해 동서남북권 4개 구청을

선정하여 '1교육 + 1행사'를 진행하며, 서울시의 역사와 특성 등이 반영된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함.

□ 2단계 : 서울시 전역에 평화·통일 교육 실시

- 양성된 퍼실리테이터들과 함께 권역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며, 자치구와 계층별 특성에 기초한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교재'를 다양화시켜 확산

<그림 5>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추진단계



2.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와 역할

1)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추진체계와 역할

- 단계별 추진전략에 상응하는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지니고, 지역적 특색에 맞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임.

□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TFT 구성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팀 산하에 담당직원과 평화·통일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전담할 수 있는 TFT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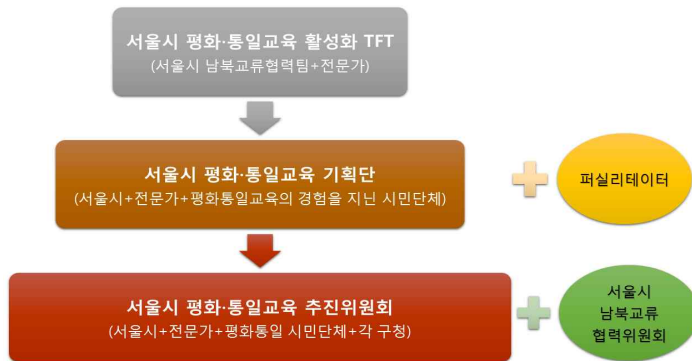
□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획단 구성

-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TFT의 논의에 기초하여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획단'을 구성함.
-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의 기획, 전략, 내용, 방법을 총괄 기획, 설계, 개발, 운영, 평가하는 총괄 교육기구로서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획단'에서는 사업의 방향을 비롯한 사업내용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서울시 산하 평화·통일교육 협의회, 교육청, 구청, 시민단체 등으로 책임과 역할을 구분하고,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배분함으로써 평화·통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추진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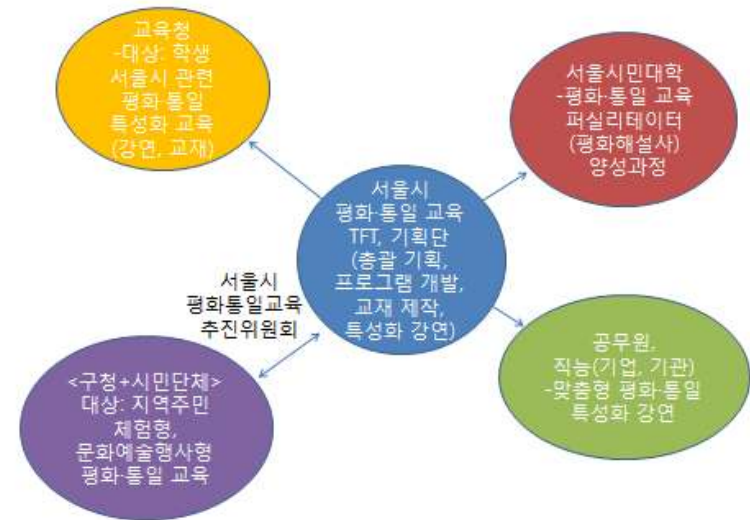
-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획단' 운영에 기초하여 서울시와 구청, 평화·통일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인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추진위원회'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연대하여 평화도시 서울시의 위상을 높여나감.
-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추진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팀과 평화·통일교육의 경험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와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서울시 자치구의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함.
-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시 서울시가 지원하고, 각 구청과 평화·통일 관련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가 관장하는 평화·통일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함.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팀을 담당 직원 확충 및 민간전문가 총원 등의 방식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추진위원회 산하에 양성된 평화·통일 교육 퍼실리테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림 6>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추진체계의 단계적 발전



- 중장기적으로 유사 기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연구원 산하에 평화도시연구팀을 설치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전문적인 평화·통일교육 및 교류사업의 계획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동시에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추진위원회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7>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추진체계의 역할



3.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추진 자원 및 예산

1)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자원

남북교류협력기금

-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함. 단순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교육 주체들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사업 중심으로 추진
- 남북 평화·통일 사업으로 매년 서울시 예산의 0.01% 할당. 중장기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고갈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서울시 예산(2016년 약 27조원 기준)의 0.01%(27억원)를 매년 할당하여 안정적인 서울시 평화·통일 사업 기금으로 사용.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 활용

- 단순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 활용. 평화·통일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진행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

2)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주요 사업

생활밀착형 평화·통일교육 사업

- 지역의 평화·통일 자산을 활용한 평화통일 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단순한 강연식 강좌를 지양하고, 지역화

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함.

평화·통일 사각지대 해소 사업

- 서울시민 중에서 평화·통일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함. 평화통일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계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

평화·통일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교재개발 사업

- 평화·통일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서울시민 대학과 연계하여 특별 과정으로 진행함. 교재는 인쇄물과 영상물로 제작

<표 8> 2016~2019년 평화·통일 교육 소요예산 추정(단위: 백만원)

추진분야	소요예산						비고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총계		1726.5	156	523.5	523.5	523.5	
지역 평화통일 교육사업	소계	197.5	10	62.5	62.5	62.5	
	3+1형 평화통일 교육		10	62.5	62.5	62.5	- 4~25개 자치구 매칭펀드 형식(50:50), - 1교육(3+1 형태) : 500만원
문화예술 행사형 평화통일 교육사업	소계	1185	60	375	375	375	
	문화예술 행사형 평화통일 교육		60	375	375	375	- 4~25개 자치구 매칭펀드 형식(50:50), - 1행사(문화예술형태) : 3000만원
평화통일 교육 퍼실리티 양성사업	소계	64	16	16	16	16	
	평화통일 교육 퍼실리티 양성 사업		16	16	16	16	- 1년 과정(1학기10강좌 20시간-중2학기 40시간+시강) :학기당 800만원 (강사료: 30만원, 강의당 지원비 50만원)
평화통일 교육 교재 개발 및 배포	소계	280	70	70	70	70	
	평화통일 교육 교재 개발 및 배포		70	70	70	70	-매해 개정(서울시+각 구청특성 추가 + 각 직업별 특성추가) : 원고료(10명*100만원) - 서울시 특성, 직능, 구청별, 편집비(1000만원), 제작비(60~70P 2만부: 4000만원), 배포비(2만부*1000원)

4.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전체 평가 방도

1)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서울시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지표는 계획단계, 실행단계, 결과산출단계, 활용단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평가 지표를 갖고 평가함.

평가목적

- 사업 평가는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추어 진행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목적과 방향',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점검',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 검토', '사업운영 개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함.

평가항목

- 평가 항목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분석과 프로그램 수요 분석으로 나누어 항목을 설정함. 사업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기관과의 협업체계 개선에 반영함.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사업대상', '프로그램 지원체계(재원, 추진주체 등)', '프로그램 전문인력 참여 현황' 등을 평가함.
 - 프로그램 수요 분석에서는 '참여자 분석', '만족도 및 평가', '이용자 수요 현황' 등을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평가단 구성

- 사업 평가단은 프로그램 참가자 및 관계기관, 외부 평가단으로 구성함.

<표 9>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공 통 지표	계획	계획수립의 적절성·총 실성·합리 성	계획 내용의 총실성	-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 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
				-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 정도
			성과목표의 합리성	- 과제 수행 수단의 적절성
				- 목표의 구체성 및 정책목표와의 명확한 인과정도
	실행	집행과정의 효율성·적 절성	집행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 총실성: 과제별 추진계 획 준수 여부(적시 집행 여부)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
			집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 는지 여부
				- 당초 설정한 목표에 달성하였는가 - 해당과제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 하였는가
산출 / 결과	목표의 달성도	과제 영향 발생정도	- 해당 과제가 미친 영향은 무엇인 가	
		평가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차기 계획에 차기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점검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 이행한 실적	
특 성 지표	각 영역별 특성지표 추가			

VI. 마치며

□ 평화도시 서울

-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는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평화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임.
- 수도의 위상에 맞는 서울의 평화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비정치, 비군사 영역에서 서울의 지정학적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불안정한 상황을 구조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필요함.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반도가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전쟁과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평화 행위가 필요함. 이러한 노력은 평화도시로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도시 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것임.

□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 서울시와 구청이 밀접한 연계 속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에서 진행하거나 진행될 프로그램이 다양성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홍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

역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 등 통일 관련 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함.

□ 평화·통일 교육 체계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1단계에서는 담당직원과 평화·통일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TFT'를 설치함.
- 2단계에서는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획단'로 확대함. 이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평화·통일 교육 요원으로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여 현장 교육에 활용하도록 함.
- 3단계에서는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획단'에 기초하여 서울시와 구청,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서울시의 평화·통일 교육의 안정화를 추진함.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연구 팀을 운영하여 전문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평화·통일 교육 추진 자원 및 예산

-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며, 단순 공모 지원을 지양하고, 서울시와 추진단체가 공동 재원을 마련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
-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시의 경우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고갈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의 일정 정도(예를 들어 0.01%)를 할당하여 평화·통일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승호. "인천 평화도시 구상에 관한 연구." 『IDI연구보고서』 2011년 5월(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11).
-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통권 제32호(서울: 한국공간환경학회, 2009).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분단트라우마와 치유의 길』(서울: 경진, 2015).
-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2014 회계연도 사업별 성과 보고서』 수원: 경기도청, 2014.
- 김민환. "경계의 섬과 포격전의 기억." 『사회와 역사』 통권 104호(서울: 한국사회사학회, 2014).
- 김창환. "통일 전 동·서독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과 실상." 『한독교육학 연구』 Vol. 8. No. 1(서울: 한독교육학회, 2003).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서울시민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2014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보고서』(서울: 서울특별시의회, 2014).
- 박광기.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남북통합지수』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이우영. 『북한 문화의 수용실태 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인천광역시청. 『2014 시정주요업무』 인천: 인천광역시청, 201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통일교육 기본계획』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_____. 『2015 통일교육 운영계획』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경기도청 DMZ정책과 DMZ관광팀 보도자료, “경기도 「DMZ포럼」 개최, 포럼에서 답을 찾는다,” 2014년 10월 27일자.

『시사IN』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하루 만에 240만 명 사상.” 2010년 5월 31일자.

(2) 외국문헌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1979.

(3) 기타

2014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Tour de DMZ) 홈페이지
(<http://www.tourdedmz.co.kr/info/index02.php>)

2015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홈페이지
(<http://www.walkyourdmz.com/walk/>)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http://www.ggtour.or.kr/>)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peace.incheon.ac.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http://sll.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인천겨레하나 홈페이지(<http://ic.krhana.org/>)

청소년탐험대 - 평화누리길 홈페이지
(<http://www.walkyourdmz.com/youth/>)

DMZ 주민아카데미 in 연천 블로그
(<http://blog.naver.com/dmzedu>)

부 록

1. 통일교육원 교육과정 세부 현황(p. 6)

구분	세부과정명	교육 계획인원			교육일정		
		기간	회수	인원			
전문과정	통일정책최고위과정	8강	1	40	320	4월-7월 제8강(격주 목요일)	
	통일정책지도사과정	44주	1	60	14,520	2.10-12.10	
	통일기획과정	26주	2	20	1,300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2주/4주	2	75	1,200	5.18-29(2주), 7.6-31(4주)	
		3일	3	75	225	4.1-3, 9.9-11, 11.23-25	
	소 계		9	270	17,565		
평화통일반구축과정	통일부교무원반	5일	3	120	600	3.9-13, 4.6-10, 6.29-7.3	
	중견기부교무원반	5일	3	135	675	6.1-5, 9.14-18, 10.19-23	
	중견실무교무원반	5일	3	210	1,050	4.20-24, 8.17-21, 11.16-20	
	접경지역지자체교무원반	3일	1	60	180	10.12-14	
	경기도통일아카데미반	3일	1	60	180	4.27-29	
	정훈장교반	5일	2	90	450	5.11-15, 7.13-17	
	보안경찰반	5일	2	90	450	5.18-22, 11.9-13	
		2일	1	200	400	3.5-6	
	타 교육기관 연계과정반	3일	1	140	420	3.18-20	
		5일	2	160	800	6.15-19, 8.31-9.4	
	소 계		19	1,265	5,205		
학교통일교육과정	초등	교장(감)반	3일	5	315	945	4.6-8, 5.18-20, 9.14-16, 10.5-7, 11.9-11
		장기반	2주	2	180	1,800	8.3-7(사이버 7.6-8.2)
		기본반	3일/4일	4	225	720	4.20-23, 7.22-24, 7.27-29, 8.12-14
		자유학기제반	5일	2	90	450	8.17-21, *16.1.18-22
		통일교육연구학교교사반	3일	1	45	135	6.16-18
		교장(감)반	3일	4	315	945	4.29-5.1, 5.27-29, 9.21-23, 10.12-14
	중등	교사반	3일/4일	4	225	720	4.27-30, 8.5-7, 8.10-12, 8.19-21
		우치원교사반	3일	1	45	135	9.9-11
		장학관(사) 및 교육연구사반	3일	2	90	270	5.20-22, 10.19-21
		교원연수원통일교육운영자반	3일	1	45	135	11.23-25
		예비교사반	3일	2	160	480	3.30-4.1, 9.16-18
		소 계		28	1,735	6,735	
사회통일교육과정	통일교육위원반	3일	3	135	405	4.13-15, 4.27-29, 5.11-13	
	민주평통자문위원반	2일	3	270	540	8.25-26, 9.7-8, 10.26-27	
	통일 관련 단체반	2일	8	430	860	3.10-11, 4.23-24, 5.7-8, 6.9-10, 6.23-24, 7.8-9, 9.1-2, 9.22-23	
	종교단체반	2일	2	125	250	5.7-8, 10.15-16	
	대학생반	2/3일	6	315	855	7.1-2, 7.15-17, 11.2-4, 11.4-6, 11.19-20, 11.25-27	
	청소년반	1일	3	385	385	12.14-12.18 기간중 3회	
	소 계		25	1,660	3,295		
글로벌교육과정	재외동포반	4일	1	80	320	11.16-19	
	재외동포유학생반	1일	2	200	200	7.13, 7.16	
	외국대학생반	1일/3일	2	60	120	3.17, 8.19-21	
	주한유학생반	2일	4	180	360	3.26-27, 6.22-23, 6.24-25, 9.15-16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반	10일	1	20	200	7.1-10	
	소 계		10	540	1,200		
사이버통일교육과정	사이버통일교육(공무원, 일반국민)	4주	10	21,000	21,000		
	교원교육	4주	10	7,000	7,000		
	한정인정	16주	4	480	480		
	반복교육	-	-	-	-		
	합 계		24	28,480	28,480		
			115	33,950	62,480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통일교육 운영계획』(서울: 통일교육원, 2015)

p.6.

2. 통일부 통일교육원 위탁 교육 과정(p. 8)

○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 기획 요원 양성 과정 : 6개월 과정으로 2개월 국내교육(사전·사후), 4개월 해외파견으로 이루어짐. 파견대상은 경기도 공무원 4~5급 중에서 1명을 선발하여 파견을 보내고 있음. 2015년부터 인사과에서 선발함.
- 통일 미래 지도자 과정 : 1년 교육과정으로 서기관급에서 1명을 선발하여 교육 파견을 보내고 있음.
- 경기도 공무원 과정 : 공무원 과정은 도·시·군 5급 이하 30명 이상 선발하여 통일정책 및 남북교류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5일 과정으로 연중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경기도 공무원 과정의 교육 주제는 접경지인 경기도의 특성에 맞추어 접경지에서의 남북교류 효과와 통일 비전 등으로 진행하고 있음.

○ 경기도 인재개발원

- 통일 대비 역량 강화과정 : 경기도 내의 5급 이하 공무원 40명을 선발하여, 한반도 정세, 통일공감대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은 3일 과정으로 연중 4회 실시하고 있음. 주요 교육내용은 북한 실상과 통일 준비 자세 등 일반 통일교육의 내용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사례 등의 경기도 특색이 반영되는 내용으로 진행되기도 함. 경기도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현장 통일교육에 경기도가 개발한 생활밀착형 통일교육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음.

3. 2014년 경기도 국외통일교육 아카데미(p. 9)

- **운용 사항**
 - 교육대상은 남북협력, 북한인권, 통일교육 등 관련 부서 근무자(경력자), 접경지 시군(연천, 파주, 김포 등), 물류, 지역개발 관련 부서 공무원, 전년도 경기도 및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전학습' → '국외연수' → '결과보고회' → '사후 재교육'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음.
- **독일 과정** : 독일 교육은 한스자이텔 재단(기독교사회당 설립자를 기념하는 시민정치재단)을 수탁 기관으로 진행함.
 - 독일 과정 (드레스덴~막테부르크~함부르크~베를린)
 - 목적 : 통일과 번영을 이룬 독일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상상
 - 대상 : 도·시·군 5급이하 공무원 및 경기도 공공기관 등 약 30명 선발
 - 기간 : 2014년 5월 11일(일) ~ 19일(월)(7박 9일)
 - 주제 : 통일로 인한 독일 물류와 접경지 변화, 그리고 철도실크로드
 - 주요 과목(장소) : 동독지역 발전(드레스덴, 할레), 동독 인권침해와 청산(라이프치히), 접경지역 변화(베르니게로데, 회텐스레벤, 헬름슈타트), 동서독 자매결연과 행정지원(막테부르크), 신재생에너지(브레멘), 철도실크로드(함부르크), 동서독 환경협력(살제)
- **중국 과정** : 접경지를 통해 분단의 현황을 이해하는 교육(상해~단둥~연길) 등으로 이루어짐.
 - 목적 :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양안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협력을 전망
 - 대상 : 도의원, 도·시·군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약30명 선발
 - 기간 : 2014년 6월 23일(월) ~ 30(월)(7박 8일)
 - 주제 : 양안관계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와 협력 방향
 - 주요 과목 : 대만 내 대중 여론과 중국의 역할, 6자회담 성과와 과제,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 내용과 진행상황, 김정은의 북한체제, 시진핑의 중국과 동북아, 동북아 경제통합의 비전, 북·중 접경지 답사

4. 경기도청 지역형 현장체험 통일교육 프로그램(p. 10)

- 다음은 경기도청이 지원 및 주최하고 있는 지역형 현장체험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들이다. 대체로 주관은 경기관광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DMZ일원의 생태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²⁰⁾
- **2014 DMZ주민아카데미 in 연천**
 - 시 기 : 2014년 8월~12월(매주 수요일)
 - 주 관 : 건국대학교
 - 주 최 : 연천군청, 환경부, 경기도
 - 내 용 : DMZ주민아카데미는 연천지역의 문제를 DMZ일원의 자원을 활용한 아카데미로 운영하였음.²¹⁾
- **나는 DMZ로 간다 팸투어**
 - 시 기 : 연 15회
 - 참여인원 : 778명
 - 주 관 : 중부일보, 경기관광공사
 - 주 최 :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 내 용 : 신청 대상별 맞춤형 현장답사 일정을 기획, DMZ일원의 안보현장견학을 통해 전략적 홍보 및 방문 활성화와 프로그램 육성
- **대학생 홍보단 『DMZ Friends』 1기**
 - 시 기 : 3개월(10월 4일~12월 20일)
 - 참여인원 : 90명
 - 주 관 : 경기관광공사

20) 경기관광포털 홈페이지(<http://www.ggtour.or.kr/>);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2014 회계연도 사업별 성과 보고서』 (경기도청, 2014) 참조.

21) 김재현·김동완·태유리·한승호, 『DMZ, 소통에서 울림까지』 (큰나무, 2014) 참조.

- 주 최 :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 내 용 : DMZ과워블로거 교육 및 육성을 통해 DMZ 홍보강화 및 DMZ 가치와 인식 개선
- DMZ 자전거투어
 - 시 기 : 연 16회, 3월~10월 넷째주 일요일(4월, 9월은 월 2회)
 - 참여인원: 4,030명
 - 주 관 : 경기관광공사
 - 주 최 :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 내 용 : DMZ 일원 관광활성화 및 DMZ 부정적 이미지 개선
- DMZ생태체험프로그램
 - 시 기 : 394회
 - 참여인원 : 11,000여명
 - 주 관 : 경기관광공사
 - 주 최 :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 내 용 : DMZ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교육 실시를 통해 생태계보전 의식 고취
- 평화누리길 걷기행사(Walk your DMZ) 지원
 - 시 기 : 연 4회
 - 참여인원 : 3,400여명
 - 주 관 : 경기관광공사
 - 주 최 :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고양시청, 파주시청, 연천군청, 김포시청
 - 내 용 : 4개 시·군의 통합행사로 평화누리길 홍보, DMZ 접경구간인 평화누리길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알리고, 걷고 싶은 길로써 홍보, 평화누리 자전거길 개장 홍보를 위한 시·군별 자전거투어 연계 개최

- 2014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Tour de DMZ)
 - 시 기 : 연 1회(6월 21일, 토)
 - 참여인원 : 1,500여명
 - 주 관 : 경기관광공사, 경기일보, 코레일
 - 주 최 :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연천군청
 - 내 용 : 연천군 일원 일대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DMZ 가치 홍보 및 화합평화통일 염원
-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
 - 시 기 : 연 1회(2박 3일)
 - 참여인원 : 192명(중·고·대 각 50명, 인솔지도자 50여명)
 - 주 관 : 경인일보, 경기관광공사
 - 주 최 :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 내 용 : 평화누리길 걷기 및 병영체험을 통한 DMZ일원의 간접체험 및 생태환경 가치 전달

5. 경기도 DMZ포럼(p. 10)

- 2014 경기도 DMZ포럼²²⁾
 - 시 기 : 연 4회
 - 참여인원 : DMZ포럼 위원, 중앙부처,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 위원 등
 - 주 관 : 경기개발연구원
 - 주 최 :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
 - 내 용 : 문화관광, 지역개발, 생태환경 분야별 DMZ정책 발제 및 논의, 이에 따른 DMZ일원 가치 보전과 합리적 이용방안 모색,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발전전략 수립

22) 경기도청 DMZ정책과 DMZ관광팀 보도자료, “경기도 「DMZ포럼」 개최, 포럼에서 답을 찾는다,” 2014년 10월 27일자.

6.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프로그램(p. 11)

1)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내용

- 시민 안보의식 고취
 - 통일안보 현장견학 : 연 6회, 250여명(시민, 초·중·고)
 - 청소년 군부대체험 행사 실시 : 1회, 200여명, 7월중
 - 여성민방위대장 병영체험 행사 실시 : 1회, 100여명, 10월중
 - 안보강연회 실시 : 1회, 200여명, 7월중
 - 민방위대원 교육시 안보교육 실시(1~4년차, 1시간 교육)
- 여성민방위대장 병영체험
 - 시 기 : 10월중
 - 장 소 : 군부대와 협의
 - 참여인원 : 여성민방위대장
 - 내 용 : 안보교육, 전시물견학, 제식훈련, 서바이벌사격, 화생방교육 등
- 안보영화 상영 및 북한 인권사진 전시회
 - 시 기 : 8월중
 - 장 소 : 시청 대강당
 - 관람인원 : 600여명(일반시민)
 - 내 용 : 통일안보 영화상영, 북한 인권사진 전시, 주먹밥 시식 등
- 지역 민방위대장(통대장) 안보교육
 - 시 기 : 연중
 - 장 소 : 300여명
 - 대 상 : 지역 민방위대장(통대장)
 - 내 용 : 통대장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2)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민관 합동 행사

- 인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
 - 시 기 : 2014년 6월 26일
 - 주 관 : 평화도시 민관실무협의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 주 최 : 인천광역시
 - 내 용 : 평화아시아안개입의 성공개최와 평화도시만들기 방안 모색

3) 평화도시 인천만들기 시민평화교육 강사단 학교 프로그램

- 평화도시 인천만들기 시민평화교육 강사단 학교
 - 시 기 : 2014년 8월 10일(일)
 - 주 관 : 평화도시 민관실무협의회
 - 주 최 : (사)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인천광역시는 보조)
 - 내 용 : 인천지역 평화통일 강사역량을 양성하여 이후 학교와 같은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4) 2030청년평화리더십프로젝트 “평화를 품은 백령도를 찾아서”

- 2030청년평화리더십프로젝트 “평화를 품은 백령도를 찾아서”
 - 시 기 : 2014년 7월 18일(금)~19일(토) 백령도 1박2일
 - 참여인원 : 10명
 - 주 관 : (사)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 지 원 : 인천광역시
 - 내 용 : 통일시대를 이끌 청년들이 서해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 평화통일 리더 육성
 - 일 정 :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집결(8시)→백령도 도착(오후1시)→백령도 견학1(심청각/사곶비행장/물범바위/중화동교회)→군부대 및 통일기념비→평화교육/공동체프로그램→팬션숙박→백령도 견학2(두문진유람선/콩돌해안/평화미술프로젝트)→백령도 출발(오후1시30분)→인천 도착(저녁7시경)

5) 2014 제8기 남북경협 인천 아카데미 세부 사항

○ 2014 제8기 남북경협 인천 아카데미

- 시 기 : 2014년 10월 8일 ~ 12월 10일(총 10강, 매주 수요일)
- 참여인원 : 59명
- 주 관 : 인천대학교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기호일보
- 주 최 :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 내 용 :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상공인, 시민, 공무원, NGO 관계자 등을 교육함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계획, 준비하고 있는 인천기업인과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인천의 남북경협 전문가 육성

강 의	강의 제목	강 사
1강 10/8(수)	남북경제 협력과 인천의 비전	인천광역시장
2강 10/15(수)	통일프로세스와 스포츠 역할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위원장
3강 10/25(토)	강화 DMZ 평화기행, (1박2일 엠티)	이시우 DMZ 사진작가
4강 10/29(수)	남북경협의 도전기 남북경협의 포문을 연 '금강산 관광'	육재희 (주)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 대표이사
5강 11/5(수)	한반도 평화 엔진, 개성공단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
6강 11/12(수)	중한관계의 현황과 전망: 시진핑 집정기 중국의 한국 정책	강용범 천진외국어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센터장
7강 11/19(수)	동북아 질서와 일본	西野純也 (NISHINO, Junya) 慶應義塾大学 法学部政治学科 准教授
8강 11/26(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통일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
9강 12/3(수)	이해할 수 있는/없는 북한	현인애 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0강 12/10(수)	통일을 위한 길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peace.incheon.ac.kr/>)

7. 서울시 자치구 주요 평화·통일 프로그램(p. 14)

1) 서대문구 '독립민주축제'

- 취지 : 자치구 지역축제 성격을 넘어 '광복절에 남녀노소 누구나 광복을 축하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종합 역사문화축제'로 마련.
- 행사 특징
 - 80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옥사(獄舍)체험 '광복의 아침'
 - 1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투사들의 의식주와 노역을 시민들이 재현하는 '1930년대, 서대문형무소의 어느 날' 진행.
 - 사전에 신청한 시민 200명, 당일 현장 관람객 500여 명이 박해받는 독립투사 역할을 해 보는 시민참여 역사 연극 '아리랑 랩소디', 만세운동, 플래시몹, 아리랑부르기 등을 통한 생생한 역사체험을 진행. 독립민주인사들의 모습을 담은 대형 걸개그림을 완성하는 '대한민국을 그리다', '독립군 구출 대작전' 등 진행.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2) 도봉구 '광복70·분단70 시민공유 작은음악회'

- 일시 및 장소 : 9월 3일(목) / 도봉동 친환경 영농체험장
- 행사 특징
 -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도봉동 대전차방호시설이 '평화와 문화'의

상징으로 재탄생.

-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음악회는 대전차방호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팝페라, 국악, 클래식 공연, 포트락 파티로 구성됨. 파티시간에는 참여 주민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아이디어를 공유함.

3) 성동구 4회 '겨레의 소리 악(樂) 페스티벌'

- 일시 : 10월 2~3일(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
- 내용 : 북한의 민족가극 '춘향전'의 아리아를 비롯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관현악곡 '사향가'와 '모란봉'을 국내에서 초연함. 이외에도 민족배합관현악곡의 명곡인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와 '도라지'를 오케스트라로 연주함.
- 취지 :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북한의 민요, 가요, 관현악곡을 소개, 평화·통일 지향. 또한 한국 클래식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음악 모색.
- 특성 : '자치구의 유일한 민족 음악축제'로 부각시키며 2012년 첫 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진행하고 있음. 출연하는 모든 연주자들이 1곡 이상 북한음악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편곡해 들려줌으로써 음악을 통한 남북한 평화 염원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함.

성동구 '겨레의 소리 악(樂) 페스티벌'



8.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수요조사 인터뷰 (1): 정현숙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p. 24)

현재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사업에서 요구되는 것은?

- 서울 시민의 권리로서 평화를 행사, 실천하는 공간 필요
- 분단구조를 인식, 해체하는 평화통일교육과 문화 조성
- 서울 시민을 주체로 세우는 서울형 평화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예술, 참여와 토론문화 형성
-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평화문화 기반 형성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사업모델의 효과 및 전략은 무엇인가?

- 국제평화도시가 되기 위한 'peace(피스) 서울'의 적극적 전략화
- 남북교류협력기금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화통일 교육모델 개발
- 도시간 국제평화문화 교류 기능 수행
- 퍼실리테이터(강사, 진행자) 양성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마련 문제는?

- 대상별 특성에 맞는 퍼실리테이터(강사, 진행자) 양성 관련

구분	고려사항	사례
초중고	- 대학생, 청년강사 선호 - 20~30대 집중양성 필요 - 정서적 유대감 용이 - 쉽고 재미있는 놀이형 수업 흥미 - 교육 참여도와 효과 높음	- 각 시민단체 대학생, 청년 강좌 및 역사기행 사업
대학생	- 참여형 토론방식 선호 -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인력 필요 - 지식전달이 아니라 문화적 접근방식 선호 - 동아리, 친목모임 등으로 연계	- 청년문화통일페스티벌, 대학생통일아카데미 등
시민	- 전문가, 명망성있는 인사 - 문화적 접근과 관계지향적 접근 - 소모임, 친목모임 등으로 연계	- 홍사단 금요통일포럼, 흥민통 통일문화기행 등
전문 직업군	- 직업군별 교육내용 개발 필요	- 통일교육원: 공무원, 교사 등 전문가과정

○ 퍼실리테이터(강사, 진행자) 표준화를 위한 강사 인증제 필요

→ 인증제도 도입 : 강사 교육 과정 개발

- 목적: 평화통일 교육의 주체로 양성.
- 기능: 시민평화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과 배출 창구
- 자격 요건: 가치관, 태도, 열의, 실천력
- 필수 항목: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가치의 실천자

9.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수요조사 인터뷰 (2):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p. 23)

현재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사업에서 요구되는 것은?

- 자치단체 서울은 외교 권한이 없지만 중앙 정부와 보완재적 관계로 비정치, 비군사 영역에서 서울의 지정학적 불안요인을 제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전쟁과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함.
-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평화적인 수단의 개발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사업은 '평화도시'로서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킬 것임.

'평화도시' 개념화 방안은?

- 평화도시란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유지되는 도시"라고 개념화할 수 있음.
- 서울시 차원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시민 안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음.
- '시민 안보'란 시민의 불안이나 공포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됨.

시민 안보와 국가 안보 개념의 차별성은?

- 시민 안보는 국가 안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시민이 안보의 주체로 참여 가능함.
- 시민 안보를 통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차원에서 접근, 총

체적인 안보를 달성하게 함.

- 시민 안보와 국가 안보는 보완재임.
- 전통적인 국가 안보만으로 안보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됨.
- 1993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제안함으로써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화됨.
-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3년 제안한 인간 안보란 '군사력을 통한 안보에서 인간의 개발을 통한 안보로 식량과 고용과 환경에 대한 안보로 변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 인간 안보는 오늘날 인권, 환경 등 인간이 처한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발전했음.
- 시민 안보는 인간 안보의 개념을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개념으로 차용한 것임.

평화도시 조성 과 함께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사업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 주민 참여형 사업 개발이 절실함.
- 자치구, 마을공동체에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남북교류 및 협력시대를 대비하는 시민 역량도 길러야함.